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놓고 두동강

옛 바른정당 vs 국민의당
의총서 찬반 정면 충돌
김관영 “원내대표 관두겠다”
반대파 “해당행위 징계해야”
정체성 갈등 다시 부상

바른미래당이 20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문제를 놓고 두쪽으로 나뉘어 정면충돌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대부분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강하게 반발한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패스트트랙 강행 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지 못하면 원내대표를 그만두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반대파 의원들은 ‘해당행위를 한 김 원내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 됐던 당 정체성 문제가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자 봉합이 어려운 정경에 이르렀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당은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협상을 지속한 뒤 타결을 보면 다시 의총을 열어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결론 내려 갈등상황을 임시 봉합했으나, 다음 의총에서도 찬반 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는 총 29명의 의원 중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4명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박주선 의원을 빼고 24명이 참석했다. 바른정당계 좌장으로 그동안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유승민 전 대표도 이날은 참석했다. 또한 손학규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 등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두번째)와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도부에 속한 원외 인사들도 함께했다.

의총은 점심도 거른 채 4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우선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반대파는 나아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당론 의결이 의무는 아니다”라고 한 김 원내대표를 비판하며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당론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선거법은 과거에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도 숫자의 횡포로 결집해 처리한 적이 없

다”고 말했다. 의총에 앞서 지상욱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중요한 법안, 정책, 사안에 대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헌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 출신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속히 통과시키자”(이찬열 의원), “선거법과 2개 법안 연계도 가능하다”(주승용 의원), “계속 협상하고 최종안이 나오면 총의를 모아 추진하자”(임재훈 의원) 등 김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니 최종안이 나오면 무기명 투표라도 해서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찬성하나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의 연계에 반대한다는 의견, 공수처법 등이 바른미래당 의견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이처럼 장당 내부에서 사사건건 충돌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의 해묵은 갈등이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뿌리가 다른 두 세력이 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윤소하 “한국당, 한반도 냉전 바라는 집단”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몽니 버리고 선거개혁 동참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해 12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직접 합의해 놓고도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히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5당 합의 내용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 것은 바로 한국당”이라며 “고집과 몽니를 중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더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며 “결

격적으로 북미 협상에 재를 뿌린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 간의 대화를 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드리우려 하고 있다”며 “미국 강경 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1야당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가 이 같이 한국당을 맹비난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듣고 나가세요. 싫은 얘기도 들어야 한다면서요”(박주인 의원), “듣고 나가세요. 자리에 앉으세요”(이철희 의원)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2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거나 항의했을 때 한국당 측이 “국민의 피끓는 소리에 귀를 막는 정권과 집권당”이라고 지적한 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5·18 유공자에 서훈 추진”

여야 4당 의원 50명 참여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과 무소속 의원 총 50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민간인 살상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확인하고,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1980년 5월 18~27일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계엄군과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5·18에 대한 일부 불지각한 세력의 의도적인 왜곡, 날조가 이뤄지고 있어 열사들에 대한 서훈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 “북미 대화 재개 정부 역할 중요” vs 야 “비핵화 사실상 무산”

외교·통일·안보 국회 대정부질문…야, 합의 결렬 파상공세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북한의 비핵화,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정부를 몰아 세운 반면 여당은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야당은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총체적인 외교·안보 무능이 드러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유

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연 국무총리를 향해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거기에서 성과가 있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총리는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생산적이었고 실질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두 정상이 모두 생산적인 시간을 가졌다. 실질적 시간을 가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종전선언이나

연락 사무소까지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은 외교적 참사”라며 “좋은 실은 이제 북핵을 인정해야하지 않느냐. 5000만 국민이 모두 머리에 핵을 이고 있다. 핵은 핵으로 밖에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며 전술 핵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후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언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하노이 회담을 복기하고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

상회담 후에 다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 보안대장으로부터 ‘지만원씨가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부·국정원·기무사 등으로부터 기밀자료를 받아 5·18일 왜곡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특히 지씨는 전 중앙정보부 직원과 자금을 조성, 조직적으로 5·18 왜곡 날조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낙연 총리에게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신안 출신 김원이 씨

서울시는 지난14일 박원순 시장과 호흡을 맞춰 민선7기 시정성과를 가시화할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원이(51) 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신안 출생으로 목포마리아회고와 성공관대 사회학과, 언론정보 대학원 석사 출신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근태 의원 보좌관, 민주당 조직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1999년 정무부시장 비서로 서울시와 인연을 맺었으며,



2011년 박원순 1기 정무보좌관, 2014년 박원순 2기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해 박 시장의 시정철학과 서울시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 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자관급)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J16 40 point 8 5 1
- J10 20 point 1 6 5 2 4
- J8 14 point 6 8 2 4 7 5 8 1
-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 J2 5 point 5 7 6 2 1 3 0 2
- J1 4 point 4 5 1 7 9 8 0 2
- J1+ 3 point 0 0 0 0 0 0 0 0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